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 가격의 인하 명령
- ② 부당한 공동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15의 과징금 부과
- ③ 동의를결 불이행 - 매출액의 100분의 15의 과징금 부과
- ④ 기업결합제한 위반 - 위반행위로 인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과징금 부과
- 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 1일당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문 3. 어떤 상품시장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연간 매출액이 아래 표와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사업자	甲	乙	丙	丁	戊
시장점유율(%)	55	25	10	5	5
연간 매출액(억원)	77	35	14	7	7

- ① 甲 ② 甲, 乙 ③ 甲, 乙, 丙
- ④ 甲, 乙, 丁, 戊 ⑤ 甲, 乙, 丙, 丁, 戊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②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의 금지
- ③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 ④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⑤ 금융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 | () | () | () |
|---|----------|--------|----------|
| ① | 100분의 25 | 3분의 1 | 100분의 5 |
| ② | 100분의 5 | 3분의 2 | 100분의 25 |
| ③ | 100분의 5 | 3분의 1 | 100분의 5 |
| ④ | 100분의 25 | 3분의 2 | 100분의 25 |
| ⑤ | 100분의 25 | 3분의 2 | 100분의 5 |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상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
- ② 가격협정의 방법에는 운송비와 같은 부대비용을 정함으로써 가격의 구성요소에 합의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 ④ 부당한 경쟁제한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효과만 발생하는지,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가 함께 발생하는지에 따라 위법성심사를 달리하고 있다.
- ⑤ 입찰담합에서 담합의 의사가 없는 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담합에 참여한 후 담합과 다른 가격으로 입찰하여 담합을 좌초시키고 자신이 낙찰받은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의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
- ㄷ.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위반행위
-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위반행위
- 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ㅂ.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위반행위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ㅁ
-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ㄹ, ㅂ
- ⑤ ㄷ, ㄹ, ㅁ, ㅂ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경쟁제한의 합의가 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합의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 ③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현행법상 합의가 추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행위의 일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공동성을 보여주는 정황사실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⑤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부당염매에 의하여 경쟁사업자를 현실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배제의 추상적 위험의 존재로 충분하다.
- ② 표적이 된 경쟁사업자에는 자신의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도 포함된다.
- ③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ㄱ. 끼워팔기의 부당성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ㄴ. 종된 상품인 비인기지구 토지의 매입 시 주된 상품인 인기지구 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 ㄷ. 끼워팔기의 경우 주된 상품 공급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어야 한다.
- ㄹ. 사원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구입, 판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③ 구성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
- ④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⑤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 및 기능의 훈련을 하는 행위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매업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상품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는 다른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필요최소한도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항상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본다.
- ④ 특허권이 독점형성의 수단으로 행사되어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⑤ 사업자조합이 이 법 제60조 소정의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의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문 14. 소비자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기본법상 농기구를 구입하는 농민도 소비자에 해당한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도 소비자에 해당한다.
-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소비자에 해당한다.
-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도 소비자로 정의되어 있다.
- 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도 소비자에 해당한다.

문 15.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소방지를 위해 원고적격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 온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만으로 제한된다.
- ②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을 갖기 위하여는 최근 3년 이상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실적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③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단체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전속한다.
- 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상 원고적격을 갖는 다른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자는 약관을 명시할 의무가 없다.
- ②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③ 약관은 이를 사용할 사업자가 반드시 스스로 만든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④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수정된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구두에 의한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이 아니다.

문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ㄱ.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상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일반원칙일 뿐만 아니라 약관의 해석원칙이기도 하다.
- ㄴ.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ㄷ.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ㄹ.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일반원칙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 중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②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③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④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문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함으로써 건전한 ()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ㄱ) | (ㄴ) | (ㄷ) |
|---|-------------|-------------|-------------|
| ① | 이용 | 규제 | 경제질서 |
| ② | 이용 | 규제 | 거래질서 |
| ③ | 남용 | 통제 | 경제질서 |
| ④ | 남용 | 통제 | 거래질서 |
| ⑤ | 남용 | 규제 | 거래질서 |

문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에 할부거래업자는 그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비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나머지 할부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⑤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문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후원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가격 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④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⑤ 가격 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문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고 취업을 조건으로 교육하는 행위
- ②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③ 판매원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④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판매원이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문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 이내에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 25.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소비자가 광고지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품의 정보를 문의하자 판매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 상품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방문판매
- ②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30개월, 30회로 나누어 지급한 후 그 공급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
- ③ 번역 일거리를 주면서, 그 일은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업자 자신이 출판한 교재를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 사업권유거래
- ④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000-0000으로 확인하여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정수기의 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통신판매
- ⑤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 계속거래

()

()

- | | | |
|---|------|-------|
| ① | 3영업일 | 10영업일 |
| ② | 5영업일 | 15영업일 |
| ③ | 3영업일 | 15영업일 |
| ④ | 5영업일 | 10영업일 |
| ⑤ | 5영업일 | 30영업일 |

법 철 학

문 1. 소크라테스(Sokrat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의 사상은 대부분 제자였던 플라톤에 의해 대화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사유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생각의 모순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인생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아는 자는 이를 행한다고 보았다.
- ④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나 규범은 없다고 보았다.
- ⑤ 『크리톤(Kriton)』에서 부당한 법률이나 판결이라도 이를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문 2. 고대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칼리클레스(Kallikles)는 강자가 약자에 의하여 지배받고 지도되는 것이 자연법이라고 보았다.
- ㄴ. 소포클레스(Sophokles)는 『안티고네(Antigone)』에서 국왕이 제정한 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제우스신이 만든 법은 어길 수 없다고 하였다.
- ㄷ.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이데아론에 근거하여 자연법을 정당화하였다.
- ㄹ. 키케로(Cicero)는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이성이라고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3.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악(惡)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 ②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신국론』에 나타난 그의 국가론은 홉스(T. Hobbes)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 ④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교회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면서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 ⑤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아 법을 영구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세속법(lex temporalis)으로 구분하였다.

문 4. 아퀴나스(T. Aquinas)의 인정법(人定法)에 관한 주장이 아닌 것은?

- ① 자연법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불충분하므로 인정법이 필요하다.
- ② 인정법은 자연법에서 유래된 한에서만 신민의 양심을 구속한다.
- ③ 인정법이 자연법에 반할 경우 그것은 법의 타락이다.
- ④ 지상의 권위는 천상의 권위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신민은 인정법에 복종해야 한다.
- ⑤ 신법에 어긋난 인정법에 대해서도 신민은 복종해야 한다.

문 5. 다음과 같이 주장한 법사상가는?

- 실체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 세속 정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은 서로 독립적이다.
- 신앙에는 그 어떤 것도 이성적인 근거가 없다.

- ① 비토리아(F. Vitoria) ② 수아레즈(F. Suarez)
- ③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④ 오컴(W. Ockham)
- ⑤ 몽테스키외(C. Montesquieu)

문 6. 동양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 ㄱ. 공자(孔子)는 덕치주의(德治主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악(禮樂)을 소중히 하였다.
- ㄴ. 맹자(孟子)는 부국강병을 통해 강한 통일 국가가 세워지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 ㄷ. 한비자(韓非子)는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기 위하여 의존해야 할 것은 형(刑)과 덕(德)이며, 형이란 처벌하여 죽이는 것이고 덕이란 칭찬하여 상 주는 것이라 하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7. 다음과 같이 주장한 법사상가는?

-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의 명령이며, 이성적인 자연 자체와 조화를 이루거나 모순됨으로써 도덕적인 억압이나 필연성이 내재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다.

- ① 엘리네크(G. Jellinek) ② 홉스(T. Hobbes)
- ③ 그로티우스(H. Grotius) ④ 루소(J. Rousseau)
- ⑤ 오스틴(J. Austin)

문 8. 보댕(J. Bodin)의 주권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 최고 권력이다.
- ② 주권은 항구적인 권력이 아니라 한시적인 권력이다.
- ③ 주권에는 제한이나 조건이 붙지 않는다.
- ④ 주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 ⑤ 주권은 입법권, 사법권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권력이다.

문 9. 다음과 같은 벤담(J. Bentham)의 법에 대한 정의가 의미하지 않는 것은?

- 법이란 국가 주권자가 자기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지켜야 하는 행위준칙으로 해석하거나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 ① 법은 주권자의 명령으로서, 그 위반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제재가 수반되는 것이다.
- ② 자연법이나 관습 그리고 도덕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없으므로 법이 아니다.
- ③ 도덕과 자연법은 법의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 ④ 국제법은 비록 강제를 결여하였으나 법으로 보아야 한다.
- ⑤ 법은 실정법규에 한정된다.

문 10. 밀(J. S. Mill)이 『자유론』에서 개진한 주장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 ㄱ. 사회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행위란 타인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삶과 행태에 대해 사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ㄴ. 음주, 도박 그 자체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행위이다.
 ㄷ.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것이 신의 뜻을 따른다거나 인간이 만든 율법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등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최악의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1.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칸트(I. Kant)는 고전적인 행복론적 도덕관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인 의무론적 도덕관을 견지하였다.
 ② 칸트(I. Kant)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피히테(J. G. Fichte)는 초기에는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의 성향을 보이다가 후기에는 독일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④ 헤겔(G. W. F. Hegel)은 법을 정신이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제도 속에서 객관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⑤ 헤겔(G. W. F. Hegel)은 사회계약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문 12. 사비니(F. C. v. Savigny)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의 발생과 발전에 관하여 유기체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② 언어나 관습, 정치제도와는 달리 법은 민족공동체와 상관없이 항구적으로 존재한다.
 ③ 법은 민족의 공통적인 신념, 일치된 내적 필연의 감정으로부터 기원한다.
 ④ 제정법은 관습법이 불확실할 때 이를 제거하는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
 ⑤ 독일 민법의 통일과 혁신은 법의 유기적 발전에 대한 이해로부터만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일 민법의 시대적 소명은 입법이 아니라 법학에 있다.

문 13. 켈젠(H. Kelsen)의 순수법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의 효력을 합법성으로 이해한다.
 ②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취한다.
 ③ 법을 강제규범으로 이해한다.
 ④ 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순수법학의 영역에서 배제한다.
 ⑤ 근본규범(Grundnorm)을 실제로 제정된 법으로 이해한다.

문 14. 라드브루흐(G. Radbruch)가 1946년 논문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펼친 주장이 아닌 것은?

- ① 법실증주의는 독일 법률가 계급을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의 법률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② 실정법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를 위반하였다면 정의에 자리를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법률은 단순히 불법에 그치지 않고, 법의 성질 자체를 갖지 않는다.
 ④ 법관은 무엇이 법인지를 물을 뿐이며, 그것이 정당한지는 결코 묻지 말아야 한다.
 ⑤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법상태보다는 더 낫다.

문 15. 현대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니스(J. Finnis)에 따르면, 법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② 아퀴나스(T. Aquinas)는 현대 자연법론의 주요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③ 신토마스주의 자연법론의 대표자로 바인베르거(O. Weinberger)를 들 수 있다.
 ④ 신토마스주의는 본질론뿐만 아니라 실재론도 중요시하였다.
 ⑤ 롬멘(H. Rommen)은 자연법의 영원한 회귀를 강조하였다.

문 16. 하트(H. L. A. Hart)의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차적 규칙들의 제정, 변경, 재판과 관련된 이차적 규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② 주로 법관들의 법실무과정에서 형성되고 수용되어 사회적 관행으로 확립된 규칙이다.
 ③ 개별 법체계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등장한다.
 ④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다.
 ⑤ 의무규범들을 법 이전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

문 17. 풀러(L. Fuller)의 법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보편타당한 실체적 자연법을 주장한다.
 ② 유노믹스(eunomics)를 비판한다.
 ③ 절차적 관점에서 법 자체에 내재하는 도덕을 중시한다.
 ④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주장한다.
 ⑤ 법의 내용적 기준과 실질적 원리를 강조한다.

문 18. 다음과 같은 권리론을 주장한 법철학자는?

- 권리(right)라는 용어는 법적 추론에서 청구(claim), 특권(privilege), 권능(power) 그리고 면제(immunity)라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권리라는 용어는 엄격한 의미의 권리인 청구권에 한정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 ① 호펠드(W. Hohfeld) ② 풀러(L. Fuller)
 ③ 라즈(J. Raz) ④ 피니스(J. Finnis)
 ⑤ 드워킨(R. Dworkin)

문 19. 존 롤스(J. Rawls)가 발전시킨 정의론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 ① 복합 평등(complex equality)
- ②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 ③ 반성적 평형(reflexive equilibrium)
- ④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 ⑤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문 20.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 ②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 ③ 국가의 목적은 사람들의 단순한 생존이 아닌 좋은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 ④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덕성을 계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 ⑤ 인간은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서사적 자아이다.

문 2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각각 중시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 | | | |
|---------------|---|-------------|
| ① 법적 안정성 | — | 정의 |
| ② 실정법을 넘어서는 법 | — | 입법의 산물로서의 법 |
| ③ 법의 도덕성 | — | 법의 명령성 |
| ④ 정당한 법 | — | 합법적인 법 |
| ⑤ 법의 이념성 | — | 법의 실증성 |

문 22. 법해석학(juristische Hermeneutik)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의 방법에 입각하여 법이해의 가능조건 일반을 탐구한다.
- ② 법해석학의 대표적 학자들로 카우프만(Arth. Kaufmann), 하세머(W. Hassemer) 등을 들 수 있다.
- ③ 카우프만(Arth. Kaufmann)은 법을 발견하는 과정은 생활사안과 규범을 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 ④ 법해석학은 법관의 선이해(先理解)가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매개로 법률을 해석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⑤ 법해석학은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문 23. 사유재산권의 정당화 논리와 그 주장자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로크(J. Locke) - 자연상태에 있는 공유물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획득한 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 ㄴ. 헤겔(G. W. F. Hegel) - 인격의 자기실현을 위해서는 외적 사물을 소유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유재산권은 정당화된다.

ㄷ.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재산의 사용이나 거래와 관련된 덕을 체득하려면 반복적 실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ㄹ. 노직(R. Nozick) -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 무주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원을 갖는다.

- | |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 |

문 24. 법학방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비니(F. C. v. Savigny)는 문법적, 역사적, 논리적, 체계적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 ② '법문(法文)의 가능한 의미'는 해석에 앞서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 현대 법이론의 일치된 견해이다.
- ③ 역사적 해석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현대국가에서 입법자가 누구인지 과연 특정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④ 법률텍스트의 객관적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는 객관적 해석론과 달리,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자의 의사를 중시한다.
- 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체계적 해석의 일종으로서,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을 할 것을 요구한다.

문 25.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 중 ()에 들어갈 말을 모두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기존 법학과는 달리 (A) 법학방법론을 추구한다.
- ㄴ. 개념의 체계성과 논리성 그리고 추상적인 규범텍스트를 강조하는 (B) 법학을 비판한다.
- ㄷ. 전통적인 법학에서 합리성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C)을 넘어서서 젠더와 관련하여 사안을 이해하려 한다.

- | (A) | (B) | (C) |
|---------|-------|--------|
| ① 성 인지적 | 형식주의 | 사회통념 |
| ② 성 인지적 | 실질주의 | 사회통념 |
| ③ 성 인지적 | 실질주의 | 주관적 경험 |
| ④ 성 맹목적 | 형식주의 | 주관적 경험 |
| ⑤ 성 맹목적 | 형식주의 | 사회통념 |

지적재산권법

문 1. 각 법과 그 목적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A. 특허법, B. 상표법, C. 저작권법

ㄱ.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
 ㄴ. 산업 발전에 이바지
 ㄷ.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 ① A - ㄴ, B - ㄱ, C - ㄷ
 ② A - ㄱ, B - ㄴ, C - ㄷ
 ③ A - ㄴ, B - ㄷ, C - ㄱ
 ④ A - ㄱ, B - ㄷ, C - ㄴ
 ⑤ A - ㄷ, B - ㄱ, C - ㄴ

문 2. 특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 하는 특허출원을 금지할 수 있다.

문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ㄷ.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발명을 특허출원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4.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대한 기술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A)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B) (C)되거나 등록공고된 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D)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 | (A) | (B) | (C) | (D) |
|---|-------|-------|-------|-------|
| ① | 날 전에 | 후에 | 출원공개 | 출원서 |
| ② | 날 전에 | 날에 | 출원공고 | 출원서 |
| ③ | 날 전에 | 후에 | 출원공개 | 명세서 |
| ④ | 날에 | 날에 | 출원공고 | 명세서 |
| ⑤ | 날에 | 후에 | 출원공개 | 명세서 |

문 5. 특허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등에 따라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도 미친다.
 ② 특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문 6.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되었거나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신규성의 판단시기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여부는 묻지 않는다.
 ④ 발명의 공지 여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발명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비밀 유지의무를 지고 있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이 부인된다.

문 7.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특허권자가 침해의 금지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문 8.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침해물품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②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특허권자는 침해대상의 실시로부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④ 특허권자는 손해액이 통상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발생이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문 9. 특허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특허권은 발명일부터 20년 동안 존속한다.
 ㄴ.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ㄷ.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문 10.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느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된 심판의 청구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② 동일사실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있더라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③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④ 일사부재리에 위반하여 제기된 새로운 심판청구는 각하된다.
- ⑤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도 다른 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문 11. 실용신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③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 ⑤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문 12. 저작권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②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③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문 13. 저작권법상 대여권의 대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 | | |
|-----------|----------------|
| ㄱ. 만화책 | ㄴ. 영상저작물 |
| ㄷ. 판매용 음반 | ㄹ.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 |
| ㅁ. 미술품 | |

-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 ④ ㄷ, ㄹ ⑤ ㄹ, ㅁ

문 14.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②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종업원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법인등에 귀속된다.
- ③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실제 창작행위를 한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 ④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법인등이 된다.
- 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문 15.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작인격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異名)으로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
- ④ 저작물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발행자로 표시된 자가 있으면 그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문 16.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처음에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③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 ④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⑤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문 17. 저작권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맨 처음의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
- ③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저작재산권자가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문 18. 아래 문장의 ()에 들어갈 단어 및 기간으로 옳은 것은?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A)이 있는 날부터 (B)으로 한다.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C)이 있는 날부터 (D)으로 한다.

	(A)	(B)	(C)	(D)
①	설정등록	10년	설정등록	15년
②	출원	10년	설정등록	20년
③	출원	15년	출원	15년
④	설정등록	10년	출원	15년
⑤	설정등록	15년	설정등록	10년

문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래방 기기로 영업을 하는 甲은 노래방 기기를 제작하는 乙이 이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

- ① 노래방 기기 제작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乙은 저작권자에게 복제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이다.
- ③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 ④ 甲의 행위가 공연에 해당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은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여 甲의 행위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0.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③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④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문 21. 상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 ②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③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선사용자에게는 해당 상표를 그 상품에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 ⑤ 동일 상품에 사용할 동일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문 22.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심결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상표권은 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한다.
- ②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표권자의 상표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할 필요는 없다.
- ⑤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에 의한다.

문 23.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②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 ③ 상표권자의 상표권 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색채로 된 상표
- 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문 24. 상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②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 25.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제도는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을 조기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여야 한다.
- ③ 무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은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과 동일하다.
- ④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20 이내의 복수디자인을 1디자인으로 등록출원할 수 있다.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수정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추가되는 세액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수정신고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의 경과 정도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는 수정신고사항이 있다고 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 ④ 수정신고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수정신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만 적용되고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전 압류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등기된 경우,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압류재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 ② 압류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된 증여세
- ③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 ④ 압류재산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 ⑤ 압류재산을 사업목적에 간접 사용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문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관한 아래 문장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위한 법정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① 100분의 10
- ② 100분의 20
- ③ 100분의 30
- ④ 100분의 40
- ⑤ 100분의 50

문 4.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은 통상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불복제기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바, 그 결정 또는 판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②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③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④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 ⑤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문 5.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급과세 입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치국가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②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 조항의 경우에도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소급효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공공복리를 위해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로써 예외 규정을 둔 경우에도, 새로운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입법권 행사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과세권 행사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 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 개정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문 6.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감면 결정일로 한다.
- ②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이다.
- ④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권(私權)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 7.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예외 사항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국가기관이 조세 쟁송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③ 법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 ④ 다른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⑤ 국가행정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

문 8.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②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
- ④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 ⑤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 9.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업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 ② 사업양수인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뿐만 아니라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③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중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양도하여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될 수 있다.
-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문 10.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판청구인에게는 담당 조세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 ⑤ 해당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의 납부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 ② 5억 원 이상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된다.
- ④ 압류해제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⑤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문 12. 한국 국적을 가진 甲은 여자 프로골프 선수로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골프경기상금 원화 환산액 2억 원(단, 한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1억 원임), 한국 골프경기상금 2억 원과 일본 광고출연료 1억 원의 소득이 있었다. 甲이 2013년 중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보다 훨씬 많다. 甲은 미혼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甲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甲의 소득세법상 2013년 귀속 종합소득신고 대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조세조약에 따른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1억 원 ② 2억 원 ③ 3억 원
- ④ 4억 원 ⑤ 5억 원

문 13.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관한 세법 적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본다.
- ③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승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 소정의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 14.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권리현장에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면 되고, 이를 직접 낭독할 필요는 없다.

문 15.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이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거주자의 배우자
-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③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④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문 16.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자 납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이월익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⑤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 17.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각 종류의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순자산 증가를 포함한다.
- 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ㄷ.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다.
- ㄹ.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8. 거주자 甲, 乙, 丙은 공동으로 출자(출자 비율 5:3:2)하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인 A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손익은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A 법률사무소의 세법상 취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 乙, 丙은 특수관계인이 아님)

- ① A 법률사무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 ② A 법률사무소의 소득금액은 甲, 乙, 丙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③ 甲, 乙, 丙은 A 법률사무소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④ 소득세법은 A 법률사무소를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기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공동사업장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甲, 乙, 丙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 19. 甲은 자신의 토지를 2010년 5월 그의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고, 乙은 2013년 7월 그 토지를 식당 운영에 사용하려는 개인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거래당사자들은 증여일 및 양도일에 각각 등기이전을 마쳤다. 이 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甲, 乙, 丙은 거주자이고, 토지는 국내에 있음)

- 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 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 다. 乙이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甲의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 ④ 나, 다 ⑤ 나, 라

문 20. 이자와 배당의 소득세법상 취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장기할부조건부로 판매할 때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 ②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③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도 이자소득으로 본다.
- ④ 익명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개인인 익명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⑤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의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문 21. 법인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 ②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 ③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 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문 22.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결손금 공제와 관련된 사항이다. 아래 괄호 안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소득(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해 ()을 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① 이월결손금 ② 과세된 법인세액
- ③ 과세표준 ④ 수입금액
- ⑤ 비과세 및 감면소득

문 2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인 甲은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이 경우 과세 대상 거래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괄호 안의 금액은 거래시 시가 또는 대가이고,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가. 유상으로 취득한 냉장고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甲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3천만 원)
 나. 甲은 자신이 생산한 컴퓨터를 乙에게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도하였다.(4천만 원)
 다. 甲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했다.(5천5백만 원)
 라.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프린터를 양도했다.(6천만 원)
 마. 甲은 乙에게(甲과 乙은 특수관계인이 아님) 설계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8천만 원)

- ① 3천만 원 ② 7천만 원 ③ 9천5백만 원
- ④ 1억 원 ⑤ 2억 6천5백만 원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甲은 사업과 관련 있는 아래의 거래를 하였다.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2014. 1. 22. 乙에게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세액(甲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4. 2. 21.임)
 나. 2013. 12. 2. 乙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2014. 1. 15. 교부받았을 경우 해당 세액
 다. 甲 소유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해당 세액
 라. 乙에게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으나 그 발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세액
 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할 경우 해당 세액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 ② 가 (×) 나 (×) 다 (○) 라 (○) 마 (○)
- ③ 가 (×) 나 (○) 다 (×) 라 (○) 마 (×)
- ④ 가 (○) 나 (×) 다 (×) 라 (○) 마 (×)
- ⑤ 가 (×) 나 (○) 다 (○) 라 (×) 마 (○)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수입에 따른 관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②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한다.
-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으로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